

오미크론 확산 속 도내 학교 99.6% 정상 등교 “탄탄한 교육복지 실현할 것”

초교 3곳·5학급 제외 763곳 정상등교·정상수업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학생들이 새 학기 등굣길에 나섰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 등교 첫날인 2일 전북지역 초·중·고교 766곳(초422교·중211교·고133교) 가운데 99.6%에 해당하는 학교(초419교·중211교·고133교)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했다. 다만, 초등학교 3곳은 학급 단위

원격수업으로 운영됐다. 고창의 1곳은 학교 자체 조사결과 학급 정원 8명 중 4명이 밀접접촉자로 파악됐고, 진안의 1곳은 2명 학급 정원에 1명이 격리자로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또한 완주의 1곳은 농촌유학센터 학생 3학급이 확진 및 격리 통보를 받아 원격수업을 결정했다. 각각의 원격수업 운영 기간은 3월 4일까지 3일간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단위 지표를 학급단위로 일원화해 새 학기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등교중지 학생이 없으면 모든 교육 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등교중지 학생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등교중지 학생 맞춤형 대체학습이 제공되고, 학급단위 등교중지 학생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학급단위 원격수업이 운영되더라도 학생은 신속환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

므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기간을 최소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극히 적은 일부 학교에서 밀접접촉자 및 격리자 발생으로 원격수업이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며 “수업 공백이 없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중·고교 입학준비금 30만 지원 초등학생 대상, 학교에서아침 간편식·대체식 제공 등 공약 발표



비율 지원금을 6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물품의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전국평균 유아교육비 이상으로 확대해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사각지대 지역에 우선해 공립유치원 설립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적 교육복지와 선별적 교육복지를 상호 절충해 모든 학생이 행복한 성장을 위한 탄탄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 전 부교육감은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초등학생 학습준비금 지원금 6만원으로 확대 지원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 실시 ▲초등학생 대상 아침 간편식·대체식 제공 ▲학교 밖청소년 대중교통·급식·온라인강좌 바우처 지원, 저소득가정 학생 어학·예체능 학원 바우처 지급 ▲특수학교 신설·확충 병행, 장애 유형별·특성별 장애인 평생교육 단계적 도입 등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5가지 구체적인 세부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중·고교 입학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학습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선보였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대응부자로 재원을 마련 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현재 매년 4천원씩 지원되고 있는 초등 학습준

이어서 그는 초등학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대체식’을 제공하고 이후 중·고교까지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다. 이는 학교에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시켜 성장발육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황 전 부교육감은 “사교육에서의 격차는 날로 커져 학업성취와 진학·진로에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어학·예체능 등 학원 바우처 지급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과 대중교통, 급식, 온라인강좌 바우처 지원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령아동 인구는 감소세에 들어섰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교의 추가 설치와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학교 전공과를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 유형별·특성별 평생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은성 기자

개학 시즌 새학기 방역·학사 Q&A

확진자 접촉 백신 접종 완료시 ‘수동감시’ 대상... 등교 가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코로나19 관련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가장 문의가 많은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정리했다.

Q. 동거 가족(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확진됐는데 학교에 가도 되나?

A.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다르다. 미접종자는 격리 해제, 미접종자는 7일 격리라는 기준 지침이 13일 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학생과 교직원만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이어서 등교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7일간 자가격리 대상자’여서 등교할 수 없다. 증상을 치료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14일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 본인의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기간으로 등교 가능하다. 이때 수동감시자인 학생은 방역당국의 검사체계에 따라 확진자(동

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다.

특히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수동감시 기간(10일간)에는 미등교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증빙자료 첨부)된다.

Q. 학생 본인이 확진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격리하고 등교 중지된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PCR검사 확진 결과를 담임선생님께 전달한다.

Q. 학생 건강 자가진단 앱이 자주 오류가 난다.

A. 교육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학년도 새학기에 맞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을 새롭게 개설했다. 추가된 주요 기능은 첫째, 학생·교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입력하는 문항을 추가했다. 둘째, 학생·교사가 방역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

을 경우 자가진단 앱에 ‘확진 입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자가진단 시스템 리뉴얼 이후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중인 앱을 종료했다가 재실행 어플 삭제 후 재설치 PC를 이용해 ‘교육부 자가진단’ hcsoduro.go.kr에 로그인해 다시 시도한다.

확년도 변경으로 사용자 정보(계정) 초기 설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가진단 앱의 오류가 계속될 경우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해 초기화 후 접속해라.

Q. 동거 가족이 확진됐을 때 검사 기준은?

A. 학생과 교직원의 검사도 일반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일 내 PCR 검사 6~7일 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특히 동거 가족이 확진됐을 때 3일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13일까지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이후 자가격리 도중 증상

이 나타나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해 양성이면 다시 PCR 검사를 받는다.

Q.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결석인가요?

A. 확진자 격리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더라도 두통이나 발열·오한·인후통 등 의심증상도 학교에 가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하다.

나중에 ‘음성’으로 판정되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학급 단위 이상으로 다같이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Q. ‘출석인정결석’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A. 반드시 별도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지정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도 증빙가능하다.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확진 통보 문자메시지만 담임선생님께 보여주어도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적정규모화 논의 대상 중학교 공모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오는 5월까지 ‘적정규모화 논의 대상 중학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전주시 중학교 신설(20년 3월 개교)시 2022년 12월까지 전주시 구도심 중학교 2개교 적정규모화 조건부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전주교육거버넌스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 구성원과 교육공동체의 참여로 원활한 적정규모화를 실현하고자 공모방식을 선정했다.

교육부 적정규모화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학생수 300명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가 우선 신청 대상

학교이며 희망 의사가 있는 전주시 중학교는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공모신청서를 검토해 논의 대상 학교를 선정하며, 학교 구성원 설명회를 거친 후 찬반투표를 통해 적정규모화 대상 학교가 확정되는 방식으로 공모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공모 신청

기간에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공간대 형성의 시간을 마련한다.

적정규모화 및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총 10년 동안 재정지원금을 분할 교부하며 학생들의 수이자부담경비 통합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한 추가 학생 배치를 위한 통합학교는 교육시설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중장기 유지 발전 가능한 학교로 거듭난다. /정은성 기자

교육공무직원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전북교육청, 맞춤형 상담·치료 지원 연중 상시 운영

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정신적 고충 해소 등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도 교육공무직원 상담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 문제, 업무 부적응, 조직 구성원 간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상담창구 및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중도 퇴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공무직원 상담·치료 지원은 맞춤형으로 연중 상시 운영되며, 상담내용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구성원 간의 직장 내 갈등,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고, 개인과 집단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개인상담은 노동자가 직접 상담(치료) 기관에 신청한 뒤 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집단상담은 구성원간 갈등조정이 필요한 그룹으로, 도교육청 행정과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업무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 준다.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 집단상담은 1팀당 연간 4회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 소요 비용 전액 지원한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